

불법 카르텔은 어디에 있는가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카르텔(Cartel)’은 본래 경제 용어로 중립적인 의미지만, 이권과 연관된 특정 조직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다. 그래서지 대통령의 입에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 카르텔을 혁파하겠다. 받아쓰기 급급한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 대통령이 ‘수능’과 결부해 교육 카르텔을 언급하고, 과학 카르텔을 운운하면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심지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노조가 불법 카르텔의 중심이라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칭하며 탄압했다. 이제는 산재 부정수급을 거론하며 산재 카르텔을 말한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계의 불법 카르텔은 도대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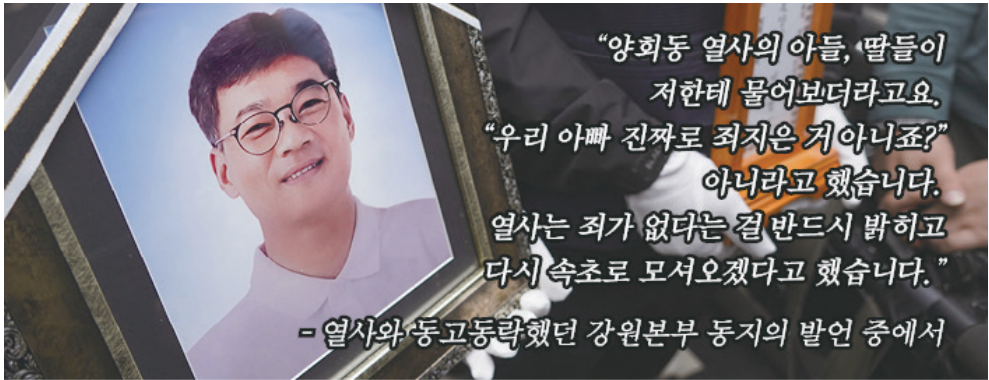
건설 카르텔? 산재 카르텔?

우선, 건설 카르텔을 살펴보자. 이미 알려진 중층적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외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봤다. 애초 건설 이슈는 건물붕괴 사고가 잇따르며 발생했는데 붕괴는 결국 부실시공의 결과다. 그런데 정부는 그 원인을 건설노조에서 찾는다. 정작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공사현장에서 노조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 외에는 역할이 제한적인데도 말이다. 결국 정부는 시민들을 자극할만한 사례를 찾아 이를 일반화하는 전형적인 침소봉대의 행태를 보였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건설 카르텔 혁파를 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으며 개선의 직접적인 주체 역시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도 말이다.


산재 카르텔은 또 어떤가. 한 언론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3명의 사례를 기

사화한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고용노동부는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산재 카르텔로 언급된 3명의 사례는 부정수급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발견됐지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출 보험급여액에 비춰봐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결국 ‘산재 카르텔’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는 카르텔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추정의 원칙 재고’, ‘합리적 수준의 보상’ 등을 말하며 산재보상보험제도 자체를 손보려 한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라면 현재 산재 승인이 너무 많고 보상금은 과도하다는 것인가!

단적으로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을 살펴보자. 총 신청건수 대비 인정률, 지역별 인정 현황 같은 것을 따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인정건수만을 한 번 보자. 업무상 질병 승인 건수는 2020년 6,827건, 2021년 7,764건, 2022년 7,601건, 2023년 8,586건이다.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좋아 보인다. 그러나 내밀하게 따져보면 인정건수 자체도 현실대비 말이 안 된다. 2023년 12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 449만 명, 건설업 216만 명이다. 과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것이다. 물론, 이 업종의 모든 노동자가 중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적절히 보정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병 연간 산재 승인 건수는 해당 산업 노동인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외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이 월등히 적은 수치다. 사실 한국처럼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속도가 빠른 곳은 찾기 힘들다. 노동강도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 수록, 특히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일수록 높기 때문에 노동자가 ‘골병’ 들 확률이 높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기 때문에 필자는 외래를 통해 이들을 자주 만난다. 도금, 주물 공장은 중노동이 태반이다. 철판을 원하는 각도로 구부리는 절곡 작업을 아직도 자신의 몸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철판을 절곡기에 끼워 넣고 팔을 올려 접는 동작을 반복해 어깨가 성할 리 없다. 조선업, 건설업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크다고 노동이 편한 건 아니다. 제조라인 작업자의 경우 반복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아파도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 보며 산재 신청을 못하고, 질병이 산재가 되는지조차 모른다. 회사에 해가 될까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본인보다 사업주를 먼저 걱정하기도 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되어도 사업주의 산재보험금은 전혀 오르지 않아 부담이 없는데도 말이다. 사업주가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사업주에게 산재는 그저 ‘안 좋은 것’이다. 게다가 막상 산재로 인정돼도 보상이 크지 않다. 휴업급여만 봐도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제공받는다. 산재 승인 노동자 대부분의 평균임금 자체가 높지 않은데 보상금이 어떻게 과도할 수 있겠는가.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또 가족과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노동자를 죄인으로 만든 자, 누구입니까

▲ 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작 깨부술 것은 '자본과 정치의 카르텔'

과연 정부가 혁파하겠다는 카르텔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현 정부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지금, 앞으로는 무엇을 보여줄지 걱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제정된 후 3년간 유예됐던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또 다시 유예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았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골목식당 사장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중처법 시행이후로 실형 선고는 단 한 건이며, 이마저도 위반사항이 매우 많았지만 대법원은 최종 징역 1년을 확정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처법의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겠지만 2022년 중처법이 발효된 이후 실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도 최근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으나 중처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중처법 시행 전에도 줄기차게 반대한 정·재계는 여전히 중처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중처법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있다면 내놓으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불법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줄이고, 산재보상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의 배경은 세수부족이다. 세수가 모자란다면 정작 법인세는 왜 내렸나. 법인세 감소로 세수가 더욱 핑크가 난 게 아닌가. 정부는 실체도 없는 유령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시라. 정작 깨부수어야 할 것은 반노동 정서로 무장한 '자본과 정치의 카르텔' 아니겠는가. 